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보장을 위한 과제



농민신문 2020년 11월 22일자

김상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외식·식품 산업의 변화가 컸다.

우선 외식과 급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빈도를 줄였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0%를 넘었고, 7월 외식업 매출액도 1월 대비 약 12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식재료 사용 감소액도 약 4조원에 이른다. 급식용 식자재도 개학 연기로 3~5월 6000억원어치가 사용되지 못해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만 했다.

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온라인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11조9600억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7월 12조9600억원으로 5개월 사이에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음식서비스와 식품류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급격한 식생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탓에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들의 식생활 변화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 외식과 급식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외식·급식은 국산 농식품의 주요 수요처로 국민 식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온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국민 식생활의 안정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며,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안정적 성장도 저해될 것이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도 소위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다. 비대면 주문이 유통업계의 대세로 떠올랐지만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발생 직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 농식품바우처·친환경농산물꾸러미·과일간식 등과 같은 현물 지원,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와 같은 가격 지원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뿐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상으로 판매되는 농식품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를 보강하고, 배달·테이크아웃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의 영양을 개선하고 외식·급식 업자들의 경영을 지원하는 일에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